

젠더갈라치기 라는 새로운 합구령을 넘어*

장소

온라인 줌 Zoom

일시

8월 16일(화) 저녁 7시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니브페미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젠더폭력

저항하고

애도하기

[온라인토론회] “젠더갈라치기”라는 새로운 함구령을 넘어 젠더폭력 저항하고 애도하기

사 회 닷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제 1

대학에서 성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1
원정 (유니브페미 사무처장)

◆ 발제 2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의 구성과 젠더폭력 대응 7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발제 3

준강간, 누가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가 23
남성아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온라인토론회] 질의응답, 토론 30

[온라인토론회] 홍보이미지 40

[온라인토론회] 참여신청자의 말들 43

대학에서 성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원정 (유니브페미 사무처장)

7월,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일동'은 인하대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차 가해 법적 대응과 학생 심리상담,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치안 강화 등의 사후 대책을 약속했다. 인하대 본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페미니즘의 요구에 응답하듯 CCTV 증설이나 경비 인력 강화와 같은 단순 치안 강화를 넘어선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하대 본부는 여전히 대학을 "최고 지성의 전당"으로 묘사하면서, 사건을 두고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이자 "학교로서는 뜻밖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문화와 감수성은 예고 없이 발생해서 한순간 퍼지지 않는다. 인하대 본부가 스스로 약속한 대책에서도 엿볼 수 있듯 사건의 배경에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왜곡된 성문화가 있다면 '뜻밖'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순된 수사다. 인하대 본부가 약속한 대책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젠더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 하면서도 사건에 대해 반박이라도 하듯 청년 남성이 겪는 고충을 늘어놓았다.²⁾ 뜬금없이 '군 제대 후 복학한 남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기도 한다'면서, 성폭력 사건에서 성차별의 맥락을 분석하는 시도 앞에서 반사적으로 남성 피해자를 꺼내 드는 김현숙 장관의 반응은 성폭력에서 읽을 수 있는 젠더 권력을 애써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1) "[속보]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엄중징계...교내 비상벨 확대 설치" (전문), 열린뉴스통신, 2022.07.18. 수정, 2022.08.15. 접속, <https://www.ონ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2273>

2) "김현숙, 인하대 성폭력 사망 두고 영풍 발언 "디지털성범죄 男 피해자 20%", 프레시안, 2022.07.24. 수정, 2022.08.15. 접속,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2413321183601>

이러한 태도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 보도에 이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인하대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에 2차 가해성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반박하며 피해자에 대한 추모를 이어갔다.³⁾ 그러나 동시에 입시 결과로 대표되는 학교의 명예를 우려하면서, 사건에서 성차별의 문제를 짚는 페미니스트의 추모를 두고 소모적인 ‘젠더갈등’을 야기하는 불순한 것으로 취급하는 목소리는 분분하다.

이들은 적극적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이들과 어떻게 구분되고, 뜻밖이라는 말로 사건의 배경을 모른 척하려는 인하대 본부의 입장과 김현숙 장관의 말은 어떻게 다를까. 이 사건은 누구의 언어를 통해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었을까?

대학 내 성폭력은 전대미문일 수 없다

교육부가 파악한 학내 성폭력 신고 건수는 대학가에 미투 바람이 불었던 2018년도에 182건, 2019년도에 346건으로, 학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2020년도에도 반년간 94건 접수될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⁴⁾ 학내 성폭력 전담기구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기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부족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고려하면 은폐되는 사건의 양은 더 많다. 대학 내 여성주의 기구 혹은 단체에서는 꾸준히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신고나 사건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독려했다. 대학 본부에 인권센터나 성폭력 전담기구의 적절한 규모, 예산, 지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특히 대학가 미투 이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대학 지형 위에서 인권센터 규정이 보호하지 않았던 익명 고발 등의 권리를 포함해 기구 규정을 개정하라고 투쟁했다.

3) “누가 인하대 학생들의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나”, 경향신문, 2022.07.20. 수정, 2022.08.15. 접속,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20060002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4)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5년간 1206건...”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49.7%”, 미래한국, 2020.10.23. 수정, 2022.08.15. 접속, 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92

2018년도 대학가를 휩쓸고 간 미투 운동의 바람은 많은 것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주로 공론화되었던 사례는 학부 또는 졸업 이후의 영역에서 가해자의 영향이 큰 예술대학 등이었다. 업계 내 성차별로 이어지기도 하는 대학의 남성중심적 구조는 교수와 학생, 정교수와 부교수, 선배와 후배, 남학생과 여학생, 외국인과 자국민 등의 위계를 만들고 피해를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전공별로 특수성이 있었을 뿐 꼭 특정 단과대의 일만은 아니었다. 그 해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운영한 성폭력 제보함에 따르면 문제 제기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처 공론화하지 못한 교수 성폭력 사건이 수 건 존재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대체로 문과대학, 법과대학과 같이 비교적 성비가 균형을 맞춘 곳에서의 제보였으며, 여전히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익명 제보조차도 자유롭지 않았다. 공과대학 등에서는 여성주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이어가는 것마저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에브리타임에 홍보물이나 대자보를 부착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중계하거나 공대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의 활동 보고 게시글을 퍼나르며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 공동체 전체에 전파되고, 페미니스트와 소수자는 유일한 학내 공론장에서 추방되고, 이에 따라 페미니스트 혐오 및 성차별적 의견이 과대대표되는 악순환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가 차별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남성호모소셜에 섞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20대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저절로 뒤쳐졌다. ‘키스와 애무를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데 20대 남성 50% 이상이 긍정⁵⁾하는 지금, 대학은 성폭력에 취약한 공간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학내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 전담기구의 개선 요구와 동시에 사건 처리 후 가해 학생의 인권을 방패 삼아 모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학내 공동체적 해결을 방해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이 성차별적 문화의 성찰로 환류되지 않으면서 젠더권력을 포착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한 대학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한 것이다.

5) “20대男 53% "키스·애무는 성관계 동의한 것"...대학 성폭력 위협수위”, 중앙일보, 2022.07.23. 수정, 2022.08.15. 접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039>

대학 본부는 한 번도 위와 같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2019년도 말 유니브페미에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평등 제도 현황⁶⁾에 따르면, 23개의 지표 중 기준을 만족한 개수를 파악했을 때 43개교 평균 9.8점으로 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2022년 올해에도 여전히 인하대만이 아닌 모든 대학의 성폭력 전담기구는 인력난이고, 차별금지 학칙은 없고, 여성 전임교수 비율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도 낮다. 대학 본부가 그간 수많은 요구에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꾀하지 않은 이상, 대학 내 성폭력은 전대미문일 수 없다.

페미니즘 검열은 ‘젠더갈등’을 해소하지 않는다

여성학 전공은커녕 페미니즘 공통 교양 강의조차도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많은 가운데, 대학 본부가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 학내 성차별에 문제제기하고 형성적 규제 마련에 힘써온 것은 언제나 총여학생회, 페미니즘 학회, 소모임 등 여성주의 단체였다. 이들은 성폭력 해결을 위한 본부 차원의 대책 촉구만이 아니라 학내 성차별적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아왔다. 이는 특히 신입생이 막 입학해 대학의 문화를 배우고 재생산할 무렵인 새내기새로배움터 전후로 중요성이 컸다. 음주와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문화, 이분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여장 대회 등을 폐지시켰으며, 대학 혹은 술자리에서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주의 교육을 진행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발행했다. 학교 본부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수율이 낮을 뿐더러 내용 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주의 단체가 진행하는 교육은 공동체 내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성인지 교육이었다. 이들은 학생회와 함께(혹은 학생회로서) 권리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 자치와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 혹은 의심하거나(학생 자치에 필요한 전문성이란 어느 수준이고, 교육안을 만들고 직접 진행해본 경험은 경력으로 취급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인권침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6) 2019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성평등 제도 현황, 2019.12.7. 유니브페미
<https://univfemi.campaignus.me/report/?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Y6ImtleXdvcmluX3M6MTM6luygnOuPhCDtmlTtmakiO30%3D&bmode=view&idx=2823422&t=board>

경우 사법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탈정치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는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를 성찰하자는 페미니즘의 요구를 ‘젠더 갈라치기’로 곡해하는 반여성주의와 만나며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서 페미니즘을 몰아내려는 마녀사냥으로 번졌다. 2018년도 서울권 대학에서 이어졌던 총여학생회 폐지 흐름이 그 예다. 당시 총여학생회 폐지 흐름의 직격타를 맞았던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총여학생회는 ‘대학은 이미 충분히 성평등해졌기 때문에 여학생회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성별 갈등만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당했다.⁷⁾

대학은 여성 입학생 비율이 극도로 낮았던 때부터, 오히려 여성 입학생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는 지금까지 성평등한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대학 본부에서도 학생 공동체 안에서도 내부의 성차별을 성찰한 적이 없고, 여자를 대학에 다니지 못하게 했던 성차별의 맥락이 교묘하게 모습을 바꿔가며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에서 성폭력은 뜻밖의 일’, ‘우리 대학은 충분히 성평등하다’는 논리가 바로 그 공간이 성평등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인하대 본부의 입장도 에브리타임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태도도 그 자체가 거대한 대학 내 성차별 지우기의 시도로서, 성차별을 인정하지도 성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고 ‘우리 대학은 멀쩡하다’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겠다는 매우 관습적인 태도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총여학생회를 폐지 시킨 이들은 그 이후 당연하다는 듯 여성주의 교지나 소모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상당수 잃어버리고 ‘성차별을 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⁸⁾는 시점에 놓여있다. 학내 성차별 문제를 담당하던 기구들이 백래시에 밀려 사라진 지금, 학내 여론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대표되는 혐오표현으로 대책 없이 후퇴하는 중이다.

유니브페미는 2년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문제를 연구하며, 대학에는 이제 공동체 내 혐오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본부의 선언이 필요하다

7) [메시지카드]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했다고요? 총여 폐지 이후를 봅시다, 2022.3.16. 유니브페미
<https://univfemi.campaignus.me/statement/?q=YT0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0785216&t=board>

8) 익명의 인하대생 B이 작성한 대자보 <성차별을 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 제목 인용. <https://twitter.com/inhamoksori/status/1551774140410957824>

고 밝힌 바 있다.⁹⁾ 학내 공동체의 책임 단위들이 정치적 역할을 다해야 하고, 특히 대학 본부에서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과 그를 둘러싼 모든 대응이 더할 나위 없이 부조리했던 가운데 우리를 벅차오르게 했던 것은, 인하대 학생의 익명 대자보로부터 이어진 릴레이 액션¹⁰⁾이었다. 반여성주의를 기치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백래시의 정점에서 그동안 지쳤던 페미니스트들이 다시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한 후 곳곳에서 활동을 재개하거나 조직화¹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여학생회 등의 여성주의 단위가 대학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후를 그릴 수 있을지는 깊은 고민이지만, 제도권 내 외에서 일어나려는 대학 페미니즘의 재부흥을 잘 견인해야 할 것이다.

9) 대학에는 인권헌장이 필요합니다! 인권헌장 제정원칙 공개, 2021.10.13, 유니브페미
<https://univfemi.campaignus.me/notice/?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uO2k6Mjt9&bmode=view&idx=8445161&t=board>

10)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동시다발 성명문 총공 제안, 2022.7.30.
https://www.instagram.com/p/Cgn_HoDLbuk/?utm_source=ig_web_copy_link

11) 인하대 사건 후 <당신의 목소리를 키워 응답해주세요!>라는 대자보를 부착한 '인하대 익명의 학생A'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과 함께 독립교지 '인하목소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2.8.7.
<https://twitter.com/inhamoksori/status/1556245109443743744>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의 구성과 젠더폭력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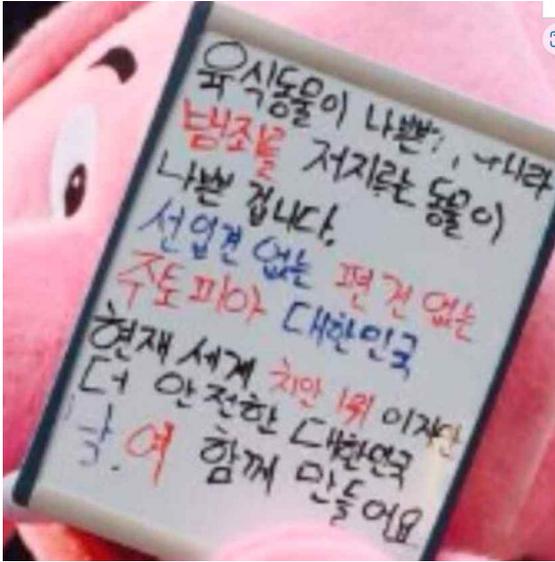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 젠더폭력의 문제화를 가로막는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

-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의제의 공론화를 가로막는 언설로서 “젠더 갈등”, “성별 갈등”, “젠더 갈라치기”를 야기하지 말라는 비난의 프레임 대두
- 성폭력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행위시 책임을 이유로 한 비난, 피해 사실 자체의 부정 등 **개인**을 향한 기존의 2차 피해 야기 방식과는 (병존하지만) 다른 양상
-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난 **대신** 젠더 관계를 문제삼는 일체의 시도를 집단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페미니즘을 그 거점으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방식. 성별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립적 외양의 주장은 결국 남성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 →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로서의 “함구령”
-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fixing)은 젠더에 대한 논의 확장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동원됨

"대체 왜 성폭행 피해자를 정치적 논리를 위해 이용하는지 모르겠
다. 누가 성별 갈라치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7.17
신주호 국민의힘 대변인

-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상성을 띠는 갈등이라는 현상을 사회 병리로 간주해 버리고, 그 조정 과정이 정치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 갈등을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를 거부하면서 정작 갈등이 문제적이라는 담론을 구성하고 오히려 갈등을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냄
- 젠더를 둘러싼 갈등을 자원, 상징 등 권력의 부정의가 아닌 대등한 시민간의 이견 대립으로 사소화하고, 그 표출을 자제할 줄 아는 “상호존중”이라는 시민성을 요청



- 2016. 5. 20 강남역 10번출구
핑크코끼리

2. 안티페미니즘의 페미니즘에 대한 의도적 왜곡

- 성별 갈등이 심각하고 문제적이라는 프레임은 누가 구성하고 있는가?
- 젠더폭력이라는 문제 진단을 거부하는 대표적 논거는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주장의 부당성. 하지만 그와 같은 언설은 바로 그것을 비난하는 이들(온라인 커뮤니티, 청년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정책 확장을 제지하는 공약을 설파해 온 정치인 등) **자신이** 여성들의 문제제기를 목살하기 위해 **스스로** 생산, 유포해 온 것
- 여성혐오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자는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여성들의 목소리를 자의적, 극단적으로 차용한 후 그 극단성을 비난함 → 페미니즘에 대한 지독하고 의도적인 오독

“젠더갈등의 해결책은 '극단의 배제'다.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일반화의 오류....무슨 사건만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 '**범인 찾기**'에 **급급한** 극단이야말로 갈등을 먹고 사는 갈등산업 종사자이며, **평범한 시민들의 적**” - 2022.7.17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여성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배제하면서 “평범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 → 그 자체가 정치의 남성중심성을 방증
- 왜? 변화하는 젠더 관계 속에서 남성으로서의 지위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을 남성 잠재적 가해자 담론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것(2020년 ‘청년의 생애 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 “노동시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지 못하고 친밀성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에 직면한 상황(배은경, 2015)에서 자신이 직면한 삶의 조건의 모순을 비판하기 보다는 손쉽게 성별을 갈등을 원인으로, 여성을 경쟁자이자 불안의 거점으로 지목
-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오직 여성들이 피해자됨을 호소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왜곡됨

-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위험/쾌락, 동의/거부, 피해자/가해자라는 이분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현실을 구조적 억압이나 행위성 개념 등을 통해 설명해 온 페미니즘의 논의를 의도적으로 왜곡 → 안티페미니즘이 구성한 페미니즘의 기괴한 복제물(Stringer, 2014)
- 즉 젠더폭력을 문제화하는 것을 “성별 갈라치기”로 만든 것은 여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이들 자신!

3. 언론의 공모

- 언론 역시 여성들의 대응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극단적 반응을 선택적으로 차용하며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유포. 집단간의 차이, 다름, 갈등을 다뤄야 할 제도 정치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의 문제진단을 반복 →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존립, 발전을 위한 것임을 망각한 것
- 오히려 피해 당시 여성의 상황을 묘사하는 선정적 단어를 남발하며 2차 피해를 조장
- 특정 사건이 한국 사회의 어떠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전달할 능력의 부재. 온라인 커뮤니티의 언설들에 기대거나 대학 및 젠더에 대한 이해도가 전문한 범죄학자를 전문성을 가진 스피커로 활용해왔음

“피의자의 경우 여성 뿐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타인에게 모두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어서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없다.. '엄마를 증오했다'는 표현은 병원에 입원치료 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분노 표현이다.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에는 남성들과도 사소한 마찰이 잦았다.” - 2016.5.23.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 그 결과, 근본적 문제 진단보다 가해자의 행위와 고의성에 대한 유추 과정, 이를 통한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의 예측, 신상공개 가능성 여부 검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문제화하는데 기여
- 이러한 사건의 개인화 방식(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지금 유가족이 계신 사건을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양측이 모두 젠더 갈라치기 하는 양측이 모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은 모두 잠잠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셔서 실제적 진실을 일단 밝혀야 됩니다, 경찰이.” - 2022.7.2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젠더 갈라치기”를 지양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한 실제적 진실 규명이 해법이 라는 진단을 그대로 인용 → 특정 개인, 사건, 법적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검토를 넘어 대학과 성폭력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
- 보도윤리(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를 근거로 성차별적 저널리즘을 비판하거나 자성하는 이들 조차도 성평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는 대신 매뉴얼화 된 준칙 적용 경향을 보임(예. 맥락이 소거된 채 금지의 항목을 나열. 이는 젠더를 해석과 논쟁의 대상이 아닌 교양과 당위의 문제로 고정시켜버림 → 페미니즘을 일종의 교조주의로 비난하는 빌미가 되 기도 함)

“다수의 매체가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무척 많이 제목에 사용했는데요, 기사 제목에는 없더라도 기사 본문에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매체는 무척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업 앞에 ‘여’를 붙이는 것은 해당 직업군의 표준이 남성이며 여성은 특수한 존재라는 식의 전제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교사, 여기자, 여대생 등의 표현은 지양되어야 할 차별적 표현입니다.”- 2022.7.23 미디어 문화연구자 윤복실 박사

4. 대학과 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논의 실종

- 그렇다면 논의되었어야 하는 것들은? “여자라서 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은 여성이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고 모든 남성이 가해자가 될 것이라는宿命론이 아니라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피해자됨을 만들어내는지를 묻는 과정이었음
- 예컨대 첫 번째 발제에서도 지적된 대학내 성차별의 발생 구조에 대한 규명과 그 개입 방안
- 많은 이들이 “배움의 전당”, “최고 지성의 전당”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것을 개탄하지만 정작 대학 조직이나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조차 대학의 운영과 존립 목표를 배움과 지성으로 여기지 않아온지 오래
- 大學[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 지식의 전제를 비판적으로 읽고 개입할 수 있는 역량 = 자신의 위치성과 부분적 지식의 한계를 알고 다름과 차이들을 통해 간주관적 객관성에 도달하려는 과정 =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더 이상 공유하는 가치가 없는 일로 간주됨 →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치의 부재
- 대학이 양성할 미래 인재의 상과 관련해 비판적 사고, 실천 능력, 인류 공동체의 일원, 교양인, 공동체 선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젠더를 통해 자신과 그 삶의 조건,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역량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젠더와 교차하여 구성되는 다양한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분석과 이해의 능력 배양 불가



인격도야

올바른 사고 판단을 바탕으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지·덕·체가 겸비된 조화로운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러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심화시켜 참으로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리탐구

실천적 진리탐구를 통하여 세계적 안목을 갖춘 창의 도전의 인재를 육성한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우월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실용적인 학문분야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봉사

보편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 선(善)을 추구하는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지리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선도해 나아갈 동북아의 핵심 축인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I 대학 교육목표

- S 대학 비전

- 이는 페미니즘 강의의 부재, 젠더 연구자의 생산 지체, 대학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배제와 남성동성사회성 지속, 남성중심적 지식 생산과 교수-학생 관계의 젠더화 된 위계와 갑질, 비판적 지식으로서 젠더 연구에 대한 의욕 상실, 강의실 안팎에서 젠더에 대한 비판적 발화 제약, 피해자 및 연대자들의 문제제기 어려움, 페미니스트 낙인과 경력 단절 및 취업 제약 우려, 가해자 처벌의 제약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그 결과 여성들의 대자보 부착은 익명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구성원들에게 당장 대학의 위신, 입결을 걱정하게 만드는 이슈로 간주됨
- 오히려 캠퍼스는 그저 취업과 미래 준비를 위한 고시원, 미래 세대의 이 과업 수행을 지원해야 할 공간으로 여겨짐 → 그렇다면 교육이 공공재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정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그때의 공공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야말로 배움의 전당인데 왜 이런 사건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건지가 제일 좀 한탄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학교가 사실은 외부처럼 그렇게 치안이 철저하지는 않거든요. 워낙 넓은 땅에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는 게 일반적인 대학의 모습이라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안 활동에 좀 더, 보안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2022.7.2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언론은 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감시망 확장이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결국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여학생들의 요구로 인해 자신의 미래 기획이 침해받았다는 주장, 생존을 위한 개별화된 이해 추구를 정당화

“경희대 4학년생인 남학생 D씨(25)는 “범죄가 야간에 캠퍼스에서 일어났다고 야간 캠퍼스 출입을 막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학생들 불편만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과제가 있거나 시험기간이면 밤 늦게까지 학교에 있을 때가 많은데 최소한의 공부 여건 보장조차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22.7.24 아주경제, 「야간출입 통제'가 대학가 성범죄 방지책?...」 공부는 어디서 하나요”」

- 개인과 조직의 평판과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지우고 은폐하려 하고, 여기에 이견을 제기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로,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실리추구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문제제기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힘을 얻음 → 평등, 정의, 민주주의, 인권, 공동체, 선에 대한 이해 확장을 표방하는 대학의 운영 목표와 역행하는 모순(예. 총여학생회 폐지, 인권 강좌 개설 반대, 대학 노동자 파업 반대 등)
- 이러한 상황은 대학내 자원 및 가치 분배를 둘러싼 젠더 부정의는 물론 대학의 기업화, 개인의 삶의 불안정성 심화, 생존을 위한 개인간 경쟁 및 **공동체 붕괴**, 그로 인한 고립과 디지털 정보의 확증편향 등이 맞물려 만들어진 것
-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대학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상황. 이는 반성폭력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지 않게 되거나, 대학 운영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한 관계자들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 한계를 강화시킴

- 한국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소유권, 경영권을 배타적 보장하는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정부 재원을 받으면서도 내부 의사결정이나 자원배분은 소수가 독점하고 그 결과 지식 생산토양의 사유화가 더욱 심각(유현미, 2019)
- 정작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조차 젠더를 통해 구성원들간의 관계와 조직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않고 있음(예.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일관된 침묵,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안전을 위한 경비원 축소의 제지 필요성 항변 등) → 대학개혁을 통해 확보한 자율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전희경, 2019)

5. 젠더 함구령을 통해 현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을 생산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주체는 현정부와 그 싱크탱크. 젠더 분석이 곧 갈등 증폭 기제라는 주장의 반복
- 피해자성의 경쟁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피해자 고통의 “같음”(다를 바 없음)을 논거로 젠더를 지우려 할 정도로 피해와 고통의 저울질을 주된 레파토리로 삼고 있음
- 또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관계를 제로섬 게임(한정된 파이-자원 분배는 물론 고통 인정을 둘러싼 투쟁-를 두고 뺏고 뺏기는 관계, 갈등으로 상정하는 프레임의 생산 거점

“그건 안전의 문제지, 또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가 넘는다. 무조건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갈 게 아니고, 인하대는 학교 내 폐쇄회로(CC)TV 문제나 학생 안전의 문제를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22.7.2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현 정부(대통령 및 집권 여당)는 페미니즘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여성정책 주무부처는 불필요하다, 여성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무고한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하필 성폭력처벌법에 기입하겠다는 의지를 국정과제를 통해 표방해 옴
- 또한 페미니즘을 단순한 개인의 이념으로 일축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정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왜 이념을 내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 - 2022.8.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페미니즘이 남성/여성의 이분법을 고수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여성”이 닫힌 범주가 아니라 여성으로 간주되는 몸, 이러한 이분법을 구성해내는 의료 및 법 지식,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에는 철저히 침묵. 나아가 이성애, 젠더이분법 중심의 질서를 고수하며 “젠더폭력”이라는 명명 대신 “여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 세력
- 또한 페미니즘이 피해자/가해자라는 이분법을 고수한다고 비난하면서도 그 판가름의 전제가 되는 강제/동의를 이분법, 협애한 성폭력 이해에 대한 개선 의지 조차 없음(비동의강간죄 도입이라는 여성폭력 NAP의 거부와 국정과제에서의 누락)
- 즉 그들 자신이 비난하는 이분법을 스스로 생산하고, 이에 의존하며 페미니즘을 공격해 온 것
- 이 와중에 제시된 성폭력 예방의 해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 “젠더 갈라치기”를 금지해야한다는 전제하에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양교육, 성폭력 방지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로서 젠더에 대한 고민에 터한 것이 아니라 그저 性(섹슈얼리티)을 聖(귀하게 다뤄져야 할)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보수적 접근 혹은 그저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교양”을 설파하려는 시도일 뿐
- 젠더라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렵고 집요한 이해 도달의 과정 대신 젠더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일탈, 범행 기회의 문제로 손쉽게 환원하는 것 역시 문제
- 동기화 된 범죄자, 적당한 목표물, 능력있는 감시의 부재라는 세 요소를 전제한 일상활동이론과 이에 터한 방법환경설계가 행위의 맥락과 이를 구조화 하는 힘을 비가시화 한 채 범죄를 피해자,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은 페미니즘을 넘어 범죄학에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Katz, 1998; Sampson & Raudenbush, 1999). 방법환경설계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 해법을 제시하는 관료들의 무지와 무능 역시 그들을 전문가로 생산해 온 대학 시스템이 비판적 지식 생산을 해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이와 같이 사회적 현상과 기존의 지식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성인지”를 수행할 능력, 앞의 의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사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 그에 따른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 초·중·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 전반에서도 성평등이나 인권, 정의에 대한 비판적 지식을 가진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음. 지식 생산의 자율성 확대나 여성 전문인력 양성은 과학기술, 전략기술에 국한돼있음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나가면서,
 - 기후환경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

국민께 드리는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2.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3.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과제 [1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민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 대학의 강의실과 소모임은 타자와 자신 사이의 경험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보다 열린 사고와 대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량,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의 주요한 실천장이 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문제 의식 결여
- 오히려 그 소통의 역량을 축소시키거나 부차화 하는 경쟁, 노력, 능력에 대한 가치 부여가 심화됨(예. 대학 서열화, 국가 경쟁력 강화, 산학협력의 강조, 교육 양극화에 기댄 입시 절차 등)
- 취학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학교폭력, 따돌림과 그 배경이 되는 젠더화 된 포래문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개입의 의지 역시 없음

6. “젠더 갈라치기”라는 함구령의 무용함

- “여대생”들은 특정 사건을 넘어 대학의 성차별 지속 구조에 문제제기를 제기하고 있음. 취업, 경쟁 중심의 대학에 정의에 대한 감각을 불어넣고 있음(예.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교수, 학과, 학계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뤄지는 페미니즘 동아리의 기자회견, 대자보 부착, 대학간 연대 활동 등) → 페미니즘이 반성폭력은 물론 대학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
- 여성들이 젠더와 교차하는 다양한 부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려가는 사이, 이를 좇아가지 못하는 소수의 스피커가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난을 통해 현실에 대한 직면을 회피, 목살하고 있음
- 그러한 프레임이 강고하게 여겨질수록 여성들에게 안티페미니스트들에 의한 낙인찍기와 폭력 행사, 취업 제약, 법적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고 반성폭력 운동에의 참여 역시 어려워 짐
- 하지만 남성이라서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청년(만 19-34세)은 21.9%에 그치며 대다수는 여성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논거가 되는 왜곡된 통념에 대한 비동의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의 허구성과 확증편향의 문제



- 2020년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으로 여성들의 입을 막고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담론 생산하기를 멈추고 대학, 직장, 군대, 친밀한 관계 등에서 남성성과 젠더가 계층, 학력, 지역 등과 맞물려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라.

준강간, 누가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가

- 수사 재판기관에서의 준강간 피해자 지원경험을 중심으로-

남성아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지난 7월 15일 인하대학교 교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부르는 사건명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내’에서,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야 할 동료 학우에 의해 / 술에 만취해 동의나 거절의 성적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의 학생이 / 성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저 사건명을 이렇게 풀어서 되뇌어보면 사건이 발생한 상황적 맥락과 사회구조적 문제가 한눈에 보입니다.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인 준강간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담론을 형성하지 못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 사건에서야 논의의 주제로 잡게 된 것에 대해 반성폭력 활동가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준강간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을 기반으로 준강간 사건들이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어떻게 외면되어 왔는지, 준강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누가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절대적으로 완전무결한 심신상실 상태를 요구하는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면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이라 합니다.

준강간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 증언, 사건발생 시간대의 전화 및 문자기록 같은 증거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판단하게 되고, 이때 수사 및 재판기관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는 가해자 처벌의 향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준강간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 하기에 CCTV나 목격자를 통해 심신상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진술하지 못 합니다. 사건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아는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선별적으로 편집하여 진술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음주로 인하여 판단 및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기억형성 어려움 외 다른 기능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¹²⁾ 가해자가 정상적인 성관계 혹은 동의한 것이라 오인·착각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준강간으로 신고를 한 피해자들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힘들거나 블랙아웃으로 보여 불기소(42%)가 되거나, 같은 이유로 무죄(43%)가 선고되었습니다.¹³⁾

12) 알콜 블랙아웃: 음주로 인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것을 이르는 것으로 기억장애 외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반면 패싱아웃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것을 이르는 것으로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됨.

13)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 단체)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의뢰하여 2019년 1월~12월까지 지원한 준강간 사례의 조사 결과로 준강간 피해자 760명 중 고소·신고한 피해자는 총 511명, 기소된 피해자는 229명, 유죄가 선고된 피해자는 112명임.

〈2019년에 지원한 준강간피해자 중 불기소된 사건의 불기소 사유〉

구분	응답	건수	비율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	24	29%
2)	블랙아웃	11	13%
3)	피해자답지않음	11	13%
4)	가해자의 범죄 고의성 없음	8	10%
5)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음	20	24%
6)	기타	8	10%
	합계 응답	82	100%

〈2019년에 지원한 준강간피해자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무죄 이유〉

구분	응답	건수	비율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	15	29%
2)	블랙아웃	7	14%
3)	피해자답지않음	4	8%
4)	가해자의 범죄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음	12	24%
5)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음	10	20%
6)	기타	3	6%
	합계 응답	51	100%

혹여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일부라도 기억하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님에도 왜 저항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준강간으로 인정받지 못 하며 준강간죄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준강간죄가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 아니라 상반되는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무결하게, 그 어떤 여지도 없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길 끝없이 요구하며, 피해자성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과 낮은 인권감수성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폭력 관련 법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정하며 변화하여 왔으나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수사 및 재판기관의 관점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동의로 귀결되는가?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과 관련된 한 컬럼은 ‘CCTV상으로 만취한 듯한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해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준강간 혐의는 명백하다’라고 썼습니다.¹⁴⁾ 물론 CCTV상에 피해자가 업혀 가거나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래도 쉽게 준강간이 인정되는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CCTV상 만취인 모습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 이전에 이미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공방은 더 치열합니다. 가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사건발생 이전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장소에 대한 CCTV확보나 목격자 진술, 범행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이나 이동수단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관할이 아닌 지역까지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사기관은 다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가해자와 둘이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것을 보면 그래도 호감이 있던 것은 아닌가요?’, ‘정말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없었나요?’, ‘성폭력 피해라고 하면서 왜 즉시 나오지 않았나요?’,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나요?’ 법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 사건 심리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¹⁵⁾고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다보면 여전히 가해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더 많이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집니다.

상담현장에서 조력한 준강간 사건의 형사절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차들이 다니는 대로에서 차 문이 열린 채 피해를 당한 것을 대질조사때에야 피해자가 알게 되었어도, 피해 이후 옷 하나 입지 않고 도망치다 쫓아온 가해자와 실랑이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찍혔어도, 사건 다음날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문자로 사과를 했어도, 여러명의 남성이 가방이나 신발 하나

14) 한국일보, 박미랑의 범죄 속으로, “인하대의 성폭행 추락사 외양간 고치기”
; 만취한 듯한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덕분에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를 절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상황은 매우 다행이고, 준강간 혐의는 명확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210110003703>

1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없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려가는 게 짝했어도 ‘사건 이전에 동의를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술에 어느 정도 취했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동의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준강간 사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동의”였다고 결론짓습니다.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¹⁶⁾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준강간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폭력으로 향하는 가해자의 오인과 착각의 가능성을 단호히 잘라내고, 피해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대응양상을 읽어내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성과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기관이 확장된 인식과 관점으로 더 많은 질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볼 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16)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

3. 일상에서 문화까지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17)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행사 성폭력 대응 지침’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¹⁸⁾ 해당 지침은 과도한 음주 지양하기, 술 게임 하지 않기, 술 마시고 산책가지 않기 등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 음주문화에 있다고 읽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원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성폭력 사건의 원인은 동료 시민을, 동료 학우를, 동료 직원을 동료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고, 그들에게는 성적 자율을 통제할 권리가 없는 수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겨온 성차별적 구조에 있었습니다. 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부터 시민사회의 문화까지 상호 주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료 시민으로서의 인식이 요구됩니다. 반성폭력 단체들이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에 조력하는 활동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여성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제안 활동 등에 주력하는 이유 또한 성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많은 단체들이 성평등한 제도의 마련과 시민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35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강간죄개정연대회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력 유무를 판단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기 위해 강간죄 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동의여부’로 바뀐다면 술이나 약물로 인해 성적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없었던 준강간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도 바뀔 것이라 기대됩니다. 애초에 의식이 없는 사람은 동의를 구하더라도 대답을 할 수 없을테니까요, 다만, 수사 및 재판기관이 피해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동의 여부에 초점을 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요구됩니다. 성관계 시의 “동의”라는 개념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점으로 맥락, 상황, 구조, 권력관계를 살피는 훈련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7) 성적동의-지금 강조해야 할 것, 밀레나 포포바, 2020.

18) 2022.07.23. 조선일보, 인하대 사건 후폭풍... 술자리지침 만든 캠퍼스

“동의 여부”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활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에서 동의는 “적극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초하에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¹⁹⁾ 동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성폭력 사건의 판단 시 가해자가 동의를 구한 방법과 내용, 동의의 경계와 유효성 여부까지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에서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피해자의 죽음과 제대로 애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은 수많은 편견과 통념속에서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발제의 마지막은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이 끝까지 싸우고 연대하며 생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강간공대위 피해자의 탄원서 한 단락을 인용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피해자의 바람처럼 너무도 흔한 성폭력인 준강간 사건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적극적 관점에 의한 ‘동의여부’판단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며, 또 보통의 피해자입니다. 성실히 저의 일을 하고, 가끔은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일상을 즐기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런 저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는 것은 단순히 제가 운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사건이 가해자같은 남성들의 잘못된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건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가해자를 도와 성폭력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의 얼굴을 한 채 사회를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섭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더욱 힘을 내 싸우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숨 쉬고 싶습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²⁰⁾

19) 2022.04.01.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한국성폭력상담소

20) 2020.07.07.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피해자입장문 中

[온라인토론회] 질의응답, 토론

사회자 _ 첫 번째 질문을 공유드릴게요. “여대생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계세요.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셨던 추지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추지현 _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했었어요. 언론이 성차별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자성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여교수, 여대생, 여배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전근대적이라는 취지였던 거 같아요. 우리가 여성임을 부정해야 하느냐? 내가 온전한 개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건 우리의 목표, 지향이지만 여성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교수, 이런 단어들이 해당 맥락과는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때가 저는 더 온전한 교수, 온전한 배우 일원으로 보지 않고 여성으로서만 주목받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것은 그 해당 조직에서 여성이 얼마나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 존재로만 보이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남성 중심성을 재 봐야 하는 문제라는 취지였던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하필 여자라서, 여성이라서 경험들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 지워야 하는지? 이런 표현 자체도 전부 맥락에 따라서 저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대생 단어는 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러웠고 이게 성평등이 매뉴얼로만 이해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마지막 발제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지만 구체적 사안을 두고 우리가 젠더 관점에서 상상해보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건 배가되지 못한 채 특정 말들만 하지 않으면 그게 마치 예의이고 매너인 것처럼 성평등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 현 정부가 여성, 남성 구분 자체를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랑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런데 여성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교사의 성폭력 이런 거 있었을 때

남성일 때랑 다르게 여성일 때는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성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주야장천 여성을 강조하잖아요. 살인 가해자도 고유정일 때랑 아닐 때랑 엄청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그 사건의 실체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맥락에 있어서 뭘 시사하는지를 설명조차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엄마가 그렇고, 여교사라서 문제고 이런 건 굉장히 문제적 한계가 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대생이라는 단어는 대학생이고 여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쟁점이 달라붙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문제는 언론이 대학 내 성차별 문제의식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대생 기표가 환기시킬 수 있는 쟁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대생이라는 말은 쓸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여대생 단어를 썼다는 게 그렇게 자성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들은 또 없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싶기는 했어요.

사회자 _ 정리해 보면 앞에 ‘여’자를 붙였을 때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여’자를 붙여서 여성임을 강조하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오히려 문제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이 사전 의견으로 보내주신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의견은 익명 님이 보내주신 의견이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남는 말이기도 했어요.

“예술사회학 연구자 이라영 선생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애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권력 앞에서 애도는 곧 저항이다' 젠더폭력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상실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애도하고, 저항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애도조차 저항정신을 담아
특히나 인하대 사건을 보면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저에게도 깊게 남았어요. 다음 남겨주신 말입니다.

(편집자 주 : 행사에서 소개하는 것에 동의하나 자료집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셔서 요약 내용으로 같음함)

대학에서 여성학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애로점,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는 내용

라고 남겨 주셨는데요. 오늘의 자리가 이 말을 써주신 분께 어떤 의미로 남을지 참 좋은 의미로 남았으면, 모두와 연대와 지지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 작게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분노의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중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익명의 20대분이 보내주신 의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안전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같은 20대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의 공간인 대학교조차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게 참담하고 슬펐습니다”

저도 대학이라는 공간이 정말로 안전한가? 라는 고민을 대학시절 내내 했었어요. 이 말에서 느껴지는 분노, 허탈함에 매우 공감이 되어서 골라보게 되었고요.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그 피해가 극대화되는 이유는 잘못된 사회 구조와 여성 인식 때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말하지 못하는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오늘 토론회에서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가 왜곡된 시선을 계속해서 발화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생각보다 과대표장되었다는 점은 함께 짚었던 거 같아요. 그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여러분에게 다른 실마리를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내주신 사전 발언들을 읽어보았고요, 여러분의 사전 의견을 읽는 동안 채팅으로 의견을 달아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추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 그들, 혐오 선동의 스피커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위축되지 말고 더 당당히 활동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혐오 선동, 선거 때마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투표 결과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차이. 그들의 목소리에만 응답하는 정치경제계, 신남성연대나 백가 등 안티 페미 유튜버들의 엄청난 조회수, 수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소수인가?

이미 여성혐오, 안티페미니즘 자체가 2030 남성문화에서 하나의 스포츠이자 유희이 된 건 아닌가 고민될 때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모멸감, 참담함,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여성,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력을 더 잘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활동하고 있는 원정님이 대답을 주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원정 _ 저도 명확하게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추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혐오 표현 혹은 혐오 세력들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특히 2030 사이에서 안티페미니즘이 분명히 스포츠처럼 통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백가’나 ‘신남성연대’의 활동을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점점 더 온라인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언가 활동을 펼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겁먹어서 활동을 해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할 만큼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사실 그래서 발제 마지막 부분에 썼던 것처럼 실제로 페미니스트들이, 특히

대학 내 페미니스트 세력이 많이 죽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자보를 붙이고,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대자보를 붙이는 사람들이나 목소리들이 지금 충분히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 대자보를 붙이셨던 분은 교지랑 같이 여성주의 책자를 만드는 일을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때로는 당사자로서, 때로는 옆에 있는 조력자로서 함께 견인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_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인된 그간 나오지 못했던 목소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요약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말이 질문해 주신 앞님에게 충분한 참고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의견을 읽어보겠습니다. 손원영 님이 보내주신 의견이구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정동을 공유하면서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요즘 흐름인 거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중화되어 해면체 같은 느슨한 관계인 것이 더 위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업 활동가가 아니어도 관심은 가지고 있다가 특정 계기에서 폭발하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요즘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느슨한 연대로 일상을 살다가 어떤 사건을 마주칠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기도 하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인하대에 조화를 보냈던 온라인 액션이 이런 느슨한 연대에서 비롯된 활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준강간에 대한 말씀 중 확실하고 명확한 성관계 동의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계약서를 쓸 수도 없고요. 뜬금없지만 우영우 드라마 속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면서 자율적이고 명확한 성관계 합의라는 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건 세 번째 발제, 남성아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질문을 해주신 거 같아요.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성아 _ 적극적 합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안내를 해드리자면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다양한 에피소드와 많은 분의 인터뷰가 들어있는 자료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정말 좋을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 ‘명시적으로’, 부분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해온 말과도 닿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희정 사건 항소심 재판 때 안희정이 어떻게 동의를 구했나요? 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눈빛으로”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우리가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의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의 스킨십이나 성관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통이 가능한 관계여야 하고, 실제로 가능할 때에야 명확하고 확실한 동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유효성도, 예를 들면 내가 만취하기 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만취한 이후에 내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성적인 쾌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하는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인가? 하면,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이 나올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다양한 때에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분위기에 이끌려서’라는 말이 통했었지만 이제는 여성도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두가 알잖아요? ‘내가 술에 취하지 않고 멀쩡한 상태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동의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고 봅니다.

가해자도, 남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술에 취하기 이전에, 확실하게 의사를 구하고 서로에게 소통했어’처럼 합의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하지 않

을까요. 그래야 적극적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합의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_ 좀 더 부연을 드리자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밀고 있는 ‘적극적 합의’ 개념은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가야 할 이상향으로서 제시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지만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정체성으로 만나잖아요. 적어도 평등에 가까운 관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진짜로 합의한 관계라고, 정말 동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의 자료집 발간자료 탭에 오시면 적극적 합의와 관련해서 많은 가이드라인과 자료집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댓글에 자료집 3개 링크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올라온 의견을 읽어볼게요

“범죄업계 전문가가 젠더폭력 전문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인 마이크, 언론의 마이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와 관련돼 있는 듯합니다. 사실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성범죄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현상도 언론에서 두드러지고요. 범죄로 처벌을 하자는 건 공사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개입, 국가적 책무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범죄 절차가 운동과 사회변화 영역을 다 점령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 같아요. 데이트 폭력, 스토킹도 젠더 개념이 잘 없이 입법이 되고 경찰들 중심으로 강의나 사회적 교양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모든 발제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시는 것처럼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결국 특정한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 구조에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범죄인 것인데요. 폭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점이 계속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

실인 거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과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나누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오늘의 토론회는 한국성 폭력상담소와 유니브페미,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 분들의 소감 한마디씩 듣고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원정님부터 소감 들어볼게요.

원정 _ 마지막에 오매님께서 남겨주신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운동이나 요구들이 있었지만, 정치에서 한 번도 “차별이라는 게 나쁜 거고 우리는 차별을 용인해서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닐까. 결국 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문을 쓰기도 했고 오늘 토론을 들었던 거 같아요.

더 많은 대학이나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 또 단체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해주신 다른 발제자분들과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지현 _ 저는 연구자 입장이다 보니까 제 생각이 제 소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단적인 안티 페미니스트의 행보, 물론 있죠. 사실 그 남성들은 남성 집단 내부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문제, 남성성의 위계 안에서 상처나 고통을 겪고 강력한 안티 페미니스트로서의 스탠스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상 페미니즘에 대해서 몰라요. 서베이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여성들이 생각하는 거랑 남성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알려고 하지 않고, 알 기회도 없었고, 남성으로서 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할 기회조차 없어서겠죠. 성찰의 과정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강의실에서 페이퍼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함

니다.

그건 대학 안에서 페미니스트 교수들이 싸우면서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사법 개정 3년 차가 됐는데 기존 강사들이 남성 교수들과의 남성연대를 통해서 자리를 계속해서 보전하는 상황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대학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지속되는 한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시간강사, 대학원생, 교수 사이의 괴롭힘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하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단체 활동에 오면 많은 분이 계신데, 이걸 젠더 연구자가 되어 연구로 끌고 가는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물론 활동도 필요하지만, 페미니즘과 결합할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할 연구가 많기 때문에 연구활동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치고 나가야 할 많은 연구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사건이 있었던 건물이 강의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랑 커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공간이라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제게 주는 임팩트가 큼니다. 그나마 이런 자리에서 이 사안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남성아 _ 저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떠올려봤어요. 그때는 정말 슬프고 절망스러웠지만 수없이 많이 붙어 있는 포스트잇으로 우리가 서로한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 많은 피해자분들이 너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피해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으로, 저는 피해자분들께서 하시는 말하기가 반성폭력 활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성폭력 단체의 활동이나 법 제정이나 개정, 또 사회문화 운동들은 사실 그

피해자분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뒤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들이 본인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성폭력, 폭력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발걸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피해자분들도 반성폭력 활동가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같이 애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_ 발제자 세 분 한마디씩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이 있는 후로 약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위 '실체적 진실'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대학 내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을 넘어서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나눠야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대학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평등한 공간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 갈라치기 라는 합구렁을 넘어

대학 내 성폭력으로 한 여성이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다. 그의 죽음에 터져나온 대학 내 성차별 공론화 대자보 역시 심사대상으로, '강성페미'의 허튼 소리로 치부된다. 그의 죽음은 어느 언론사들의 수익을 위한 클릭수 뿔튀기 용으로 소비되어 존엄한 영면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 세상은 연일 그의 죽음이 '젠더'때문이 아니라고, '성차별'과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떠들어댄다. 여성으로서 경험한 폭력을 여성대상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이라고 말조차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목도한 것이 진정한 젠더폭력이 아닌가? '젠더 갈라치기'라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저항과 애도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 차별과 성폭력이 공론장에 쏟아져 나오는 걸 두려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애도와 저항만이 승인되는가?

사회 **닷별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니브페미,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젠더폭력 저항하고 애도하기

발제

1.

대학 내 성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원정 (유니브페미)

2.

**"젠더 갈라치기"라는 함구령,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까?**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3.

준강간, 누가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가?

남성아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온라인토론회] 참여신청자의 말들

● 자료집 수록에 동의한 참여신청자의 말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건을 보고 우리사회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아직도 젠더폭력을 젠더폭력이라 말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구요. 그럼에도 우리가 목소리 내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꼬)

젠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갈등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덮어두면 그 골이 깊어질 것은 뻔한 일일진데 함구령이라니요! 이 무슨 요상한 세상인가요! (최지인)

젠더기반이라고!!!! (지은)

어떻게 이 사건을 안전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같은 20대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의 공간인 대학교 조차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무척 슬펐습니다. (익명)

준강간 사건 피해경험자가 조사기관에서 진술 시 당시 상황을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면 "다 기억 하시네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기억이 나니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성폭력 피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러 왔나?"라는 답을 듣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이 상대와 나 사이에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또 구체적으로 합의와 동의 또 거절할 수 있는 관계이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지만 이러한 성인지를 가진 조사기관은 드뭅니다. 피해경험자도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거나 조사 기관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한 2차 가해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2차 가해는 자기 검열과 자책 그리고 무고에 대한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외중에 한 대학에서 발생한 준강간 및 페미사이드 사건을 개인의 안전불감증이라고 보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안일한 시선이며, 성차별과 폭력으로 죽어가는 여성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감이 만들어낸 무책임한 관점입니다. (익명)

캠퍼스 내 성폭력은 늘 많지만 묻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학교에서 은폐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학교가 피해 학생 권리보호에 힘써야 하는데, 왜 아무 생각없는 곳이 많을까요. (익명)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피해가 극대화되는 이유는 잘못된 사회구조와 여성인식 때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할 방법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명아)

가해자없는(가해자를 가려주는 사회) 젠더 폭력 (익명)

정부여당대표의 성상납 성매매 증거가 거의 명확히 드러나도 끝까지 발뺌하면 의혹으로 묻히며 동성여론마저 생기는 걸 지켜보며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성폭력사건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한 가해자는 죄질의 경중을 떠나 전사회적 질타를 내내 받고, 신뢰성있는 증거가 버젓이 밝혀져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되레 의혹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삼가고 사건마저 잊혀지는 일이 빈번해 보입니다. 때문에 소위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워 가해자에게 마치 가혹해보이는 공동체일수록 내부 문화를 돌아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끝내 인정하지 않거나 겨우 드러난 몇몇 가해자를 꼬리자르기로 도려내는 식으로만 제 할 일을 다 한양 하곤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구한다면, 그래서 저지른 잘못에 응당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로의 정상적 복귀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매듭풀기의 시작인 인정이 우선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과잉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익명)

피해자를 욕하는 2차 피해 (익명)

개인의 사건으로만 다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익명)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 충격이 큼니다. 과거의 고통도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김태완)

무슨 말을 어찌 할까요 그저 망연자실 (배진경/진경)

성폭력을 젠더 문제와 빼서 보라는 기계적 중립의 등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송소영)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아침 수업전 교수님을 만났는데 아침 먹었냐고 물어봐서 아침 직접 해먹고 왔다고 하니 "○○이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나 봐 그래 그래야 시집 잘가지". 옆에 있던 남학생이 똑같이 아침 직접 해먹고 왔다고 하니 "바쁜 아침에 직접 밥까지 차려먹고 왔어 대견하네 예고 힘들었지 누가 부인이 될지 정말 일등신랑감이야."
(정은영)

만약 그녀가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 일이라는 것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복희)

이번 인하대 성폭력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결된 여성들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애도가 필요한 사건이지만 '더 이상의 애도를 그만 해달라'라는 유족의 요구와 충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접근해 나가야할까요? (준태)

성별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등, 우리는 갈라치기라는 말을 많이도 듣는다. 또한, 젠더 갈등, 성별 갈등, 남녀 갈등이라는 말 또한 수없이 많은 듣는다. 하지만 이 갈등이라는 말이 맞긴한가? 이걸 갈등이 아니라, 그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가하는 일방적인 폭력과 억압이다. 어느 쪽이 억압하는 쪽인지는, 머리가 있으면 다 알테니 굳이 언급 않겠다. (익명)

철저하게, 처절하게 수사하라. 준강간 무슨 말이나. 이걸 범죄이다. 준강간은 더 가중 처벌해야 한다.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가중처벌하라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였고 가족이 있을 피해자의 죽음을 기억하며 당신에게 평안있기를 온 맘 다해 빕니다. 모든딸들에게 안전한 국가가 되길 (신순임/기백)

[온라인토론회]

“젠더 갈라치기”라는 새로운 함구령을 넘어 젠더폭력 저항하고 애도하기

2022년 8월 16일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 유니브페미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